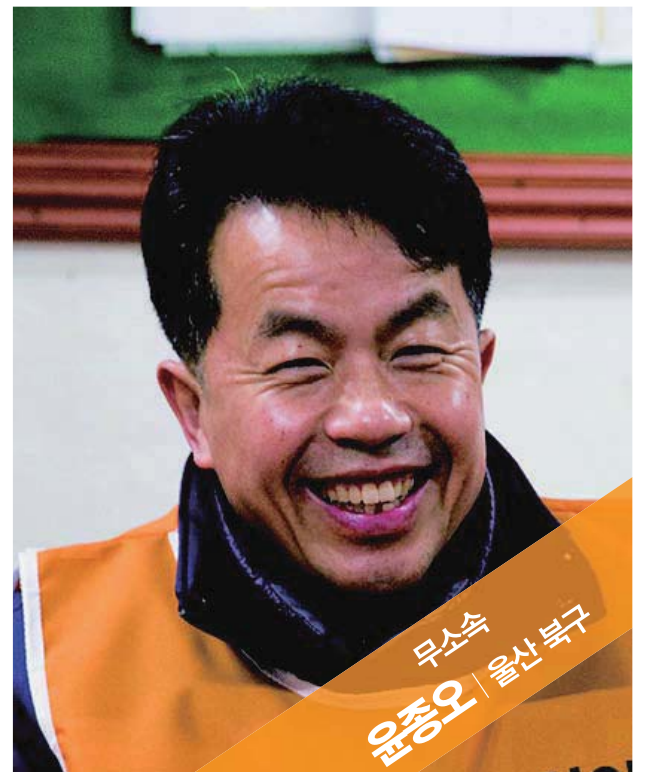


변화 염원 대중이 지지하는 진보 · 좌파 정당과 후보

민주노총 전략후보들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 관련 기사 2, 3, 4면

730 번째 4월 16일

2016.04.16

세월호 참사 2년

기억과 약속 행동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

일시장소: 오전 10시~12시(정오) / 안산 합동분향소

416걷기 "진실을 향한 걸음"

일시장소: 오후 2시~4시 / 안산 합동분향소 집결 (1시 접수)

전국집중

범국민 추모문화제

일시장소: 오후 7시 / 광화문 중앙광장 (세종대왕상 앞)



누구의 말일까요?

힐러리 클린턴 : “해지펀드 매니저 단 25명의 연봉이 미국 유치원 교사 전체의 연봉보다 더 크다. 이런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맷글 : “당신이 20분 연설하고 골드만 삭스에게서 받은 돈이 유치원 교사가 10년간 버는 돈보다 더 많다는 건 왜 말 안 할까?”

힐러리 클린턴의 좌파 흉내 내기와 위 트윗에 달린 맷글

“여자의 치마와 연설은 짧을수록 좋더라.”

안철수가 참석한 국민의당 합동유세에서 전 광주시 정부부시장 이윤자

“이 봄에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사람이 나이가 드니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 것도 견딜 수가 없고, 이제 자세를 좀 바꾸고 싶다.”

중국 〈남방도시보〉 한 기자가 정부 검열에 항의해 사직하며 남긴 글에서

“안철수 대표를 꼭 선택해 달라.”

노원병 선거 유세에서 새누리당 김우성의 고백

“3만 유로(약 4천만 원)”

프랑스 나치 정당 국민전선을 창당한 장-마리 르펜에게 선고된 벌금형. 르펜은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가스실은 제2차 세계대전 역사의 소소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망언을 했다.

“[세월호 인양 말자는 말은] 다 맞는 말이다. 지금 그 안에 9명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도움을 주겠다.

“배는 가라앉은 지 2년 됐다. 그걸 끌어올려서 다른 의도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문제”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들을 짓밟는 새누리당 김진태

“파나마 페이퍼 [폭로]의 배경에는 강력한 세력[미국?]이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파나마 페이퍼” 폭로로 중국 지도부 친인척들이 조세회피처에 거액을 숨겨놓은 게 드러나자 내놓은 ‘음모론’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 ★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 ★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
- ★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 ★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
지급 방식과 시점이 달라도 중앙 반납으로 공동 대응해야
- ★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자본주의 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노동공약 분석

이정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개약을 추진하고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공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위한 2대 지침 폐기, 노동개약 저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권 보장 등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가맹 · 산하 노조들은 노동개약 저지를 위해 새누리당 심판과 진보 · 좌파 정당에 계급 투표를 할 것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

누구나 예상하듯,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기업주의 편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반대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약을 하는 것이라고 포장해 왔지만,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진정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최근에는 총선 표를 의식해 최저임금을 9천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발표했다가 그조차도 며칠 만에 거둬들였다.

이처럼 가증스러운 새누리당에 비하면 더민주당은 노동계의 요구를 약간 수용했다. 그러나 그들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양보 · 희생”하라고 주문하는 물타기의 문제점을 또다시 드러냈다.

더민주당은 그동안에도 ‘노동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데다,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그들은 정부가 국회를 우회해 2대 지침을 발표한 것은 비판하면서도, 임금피크제 · 임금체계 개악 등 노동개약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통상임금 · 노동시간 관련 법 개악에 대해서도 여당과 “큰 틀의 합의”를 한 상태다. 더민주당 이목희 정책위 의장은 파견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더민주당의 노동공약은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과 파업권을 보장하는 것에도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재벌 · 기업주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만들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대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재벌 증세, 경영권 제한, 재벌 대기업의 산별교섭과 하청 교섭 참여 등에 “부정적이거나 대단히 소극적”(민주노총)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는 더민주당의 최근 우클릭을 반영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 정당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수호에 헌신하는 당이라는 계급적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다.

더민주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당은 노동공약 자체가 매우 부실하고, 2대 지침 폐기조차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는다.

노동개약 저지

반면 정의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녹색당과 같은 진보 · 좌파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제시한 총선 요구안을 지지하며 자본주의 정당들



진보·좌파

노동개약에 분명히 반대하는 진보·좌파 정당들을 지지해야 앞으로 투쟁에도 유리하다.

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 줬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라는 선명한 구호를 내걸고 2대 지침 폐기를 주장한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월급 3백만 원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 원, 공기업 · 대기업 임원 연봉 상한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놴.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5시 칼퇴근 법’, 연간 1천8백 시간으로의 노동시간 상한제 등 노동시간 단축도 제시했다.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약들도 좋은 요구들이다. 가사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 ·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공격적 직장폐쇄와 파업에 대한 손배 · 가압류 금지 등.

다른 진보 · 좌파 정당들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내걸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노동당은 ‘35시간 노동시간제’를 제안하고 3개월 평균 주 35시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는 패 파격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여기서는 특히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이 줄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노동운동 내에도 이 점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금이 줄면 줄어든 임금을 벌충하려고 다시 연장 노동을 하게 되고, 그리 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

민중연합당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함께 최저임금 체불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주장하는 점이 눈에 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 도입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2의 전태일법’ 제정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연합당이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이주민 방어를 위한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 정부

의 인종차별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주민 방어는 진보 · 좌파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인데 말이다. 반면, 녹색당은 진보 · 좌파 정당 중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관련 공약이 가장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미등록 합법화, 난민 지원 강화 등 이주민들의 중요한 요구들과 ‘이주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를 공약으로 담았다.

일부 우려스러운 공약들

한편, 정부와 사용자들의 임금 공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진보 · 좌파 정당들이 임금체계 개악 저지 등을 중요하게 내세우지 않은 점은 아쉽다. 이는 주로 대기업 · 공공부문 정규직의 임금을 적극 방어하고 나서길 꺼리는 입장 때문인 듯하다. 노동당을 제외한 진보 · 좌파 정당들이 노동시간 단축 공약에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진보 · 좌파 정당들의 일부 노동공약에는 우려스런 내용도 있다. 예컨대, 정의당이 사용자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계급 격차뿐 아니라 노동자들 내부의 소득 격차 문제를 중요하게 보며, 그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한 ‘초과이익 공유제’가 그렇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이윤 일부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기업 간 이윤 배분을 조정한다 해도 자력으로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인상이 하청기업에 나눠 줄 ‘초과 이익’을 줄인다면서 말이다.

노동운동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 축소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늘리려 노력하는 것이다. 현 시기 임금 · 소득 정책의 핵심 문제점은 ‘임금 없는 성장’, 계급간 소득 격차다. 투쟁을 통해 임금을 상향평준화 하려고 애쓸 때, 하청 ·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면서도 ‘정규

직 양보론’으로 빚나가지 않을 수 있다.

정의당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해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부의 노동개약 추진에 들러리 구실을 한 노사정위를 비판하면서도, “비정규직과 청년들, 시민사회계까지 두루 포함한”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제안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실질화하는 데 힘을 신기보다 국회 내 협상, 야당 의원들과의 공조를 중시하고 수동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했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대에 “사회적 논의”로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공격을 막아 내기가 어렵다. 오히려 정작 투쟁이 필요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화해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 심지를 늪늪하게 만들기 십상이다. 1980~90년대 내내 유럽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됐고 사회적 논의기구가 가장 제도화돼 있는 독일에서 이런 약점을 잘 보여 줬다.

이 같은 우려점은 있지만, 진보 · 좌파 정당들은 대체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 · 개선하는 요구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이 선전하길 바란다. 그리고 총선 후에는 공약대로 노동개약 저지를 위한 노동자 투쟁을 방어하며 함께 투쟁해야 할 것이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상

맑시즘 2016

7월 21일(목)~24일(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www.marxism.or.kr

※ 맑시즘은 16번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 총선

진보·좌파 후보와 정당들이 지지를 얻다

20대 총선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새누리당의 정당지지도가 하락했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반민주 행태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빚어낸 정치 위기 덕분에 보수 지지층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물론 공천 과정에서 여권 내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배신과 복수’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들의 ‘진박’ 마케팅은 점차 ‘사죄·읍소 마케팅’으로 바뀌고 있다.

‘중도 보수층’에 경쟁적 구애를 하면서 전통적 야당 지지층에게서 볼멘소리를 들던 더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부분적 반사이익을 얻는 듯 보인다.

물론 접전인 곳이 많아 최종 선거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몇 달 전 새누리당이 1백80석 운운하던 일을 떠올리면 지금은 그런 언사들이 허세처럼 느껴진다. 반박근혜 야권 지지층이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끼는 이유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진보·좌파 정치세력이 제한된 범위이지만 전진을 하는 듯하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노동운동과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부분적으로 도전한 것이 진보·좌파 정치세력에 큰 도움이 됐다. 물론 주류 정치권에 대한 환멸도 영향을 끼친 듯하다. 박근혜 정부 심판 투표가 진보·좌파 지지로 표현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만약에 새누리당의 당선자수가 19대보다 줄고, 울산, 창원 등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여럿 생기고 진보·좌파의 득표가 늘어난다면, 이후에 투쟁이 일어나기도 한결 쉬워질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도 ‘노동개혁’ 저지 투쟁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총선을 발판으로 향후 투쟁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진보·좌파 정당과 후보들의 선전을 바란다. 투표 그 자체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지지한, 박근혜 심판과 “노동개혁” 반대를 내건 후보들의 선전은 대중 투쟁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쟁의 대의가 전국적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자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 북구·동구에서 민주노총 전략 후보들의 당선을 바란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함께할 것을 다짐한 울산 민주노총 전략 후보들(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울산 동구 김중훈 후보, 네 번째가 북구 윤종오 후보, 가운데는 민주노총 지지 후보인 울산 중구 노동당 이항희 후보)

민주노총 전략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다

울산의 북구와 동구, 경남 창원성산에서 노동정치 1번지 선거구다운 저력이 나타나고 있다.

울산 북구의 무소속 윤종오 후보는 울산 지역 언론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47.7퍼센트(새누리당 후보는 33.7퍼센트)로 월등한 우위를 보여 줬다. 동구의 김중훈 후보도 터줏대감인 새누리당 후보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과거와 비교

하면 이 자체가 선전이다.) 창원성산의 노회찬 후보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현역 의원을 앞서고 있다.

공경에 처한 새누리당은 특히 울산에서 색깔론을 총동원하고 있다. 윤종오, 김중훈 두 후보가 과거 진보당 소속으로 구청장에 출마했던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이다. TV토론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냐’는 식의 유치찬란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탄압도 벌어졌다. 4월 7일 선거와 무관한 북구 지역 시민단체 사무실 2곳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윤종오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로 쓰여 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등이 즉각 항의 성명을 내어 “표적 수사”, “정치 공작”이라고 규탄했다.

이는 누가 봐도 새누리당 후보 윤두환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을 만회하려는 정치 탄압이다. 윤두환이 국회

의원일 때, 보좌관 월급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터져 공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 노동운동의 선거 도전과 선전이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여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걸림돌이 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세 후보는 이런 치졸한 공격에 맞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계급 투표로 이 후보들이 당선하기를 바란다.



경남 창원 성산 노회찬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의 공약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에 노동운동과 진보·좌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제안해 총선공투보를 꾸렸다.

총선공투본은 ‘노동개혁’ 반대, 재벌의 사회·경제적 책임 전면화, 노동중심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발판 마련 등을 목표로 구성됐다.

이런 목표들에 동의해 여러 정치·사회단체들은 물론이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의 진보·좌파 정당들도 참여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전략 후보는 현재 6명이다. 앞서 다룬 세 후보 외에도 경북 경주 무소속 권영국 후보, 부산진을 무소속 김재하 후보(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대구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본부장) 등이 그들이다.

당선이 현실적 목표는 아니지만, 새누리당 강세 지역에서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노동운동의 대의를 대변하는 세 전략후보들의 헌신도 훌륭하다. 이 후보들이 모두 선전해 새

누리당에 향후 노동자 투쟁의 경고장을 제대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노총 후보 23명과 민주노총 지지 후보 28명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진보·좌파 정당 네 곳과 무소속 진보·좌파 후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전

이런 후보들에게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과 주류 야당들에 대한 실망은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이 많은 수혜를 얻고 있다. 지난 2년간 세월호 운동과 노동운동의 도전과 일부 좌파와의 통합 이후 당원도 늘고 지지율이 올랐다.

특히 “노동개혁”과 테러방지법 등 민주적 권리 침해에 반대하는 등 운동의 요구를 대변해 지지율이 확연히 상승세를 탔다. 정의당은 평균 3백만 원 월급 시대를 만들겠다며 임금과 복지 향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구에선 심상정 대표(경기 일산 고양갑)와 노회찬 전 대표(경남 창원성

산)가 당선이 유력하다. 비례에선 당초 2~3명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4~5명으로 기대치가 올랐다.

비례 2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출마한 노동당은 기본소득 30만 원 지급,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같은 핵심 정책을 부각시키고 있다. 노동당은 이를 위해 재벌 증세를 하자고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 직후 “가만히 있으라” 행진을 주도해 운동 건설에 일조한 용혜인 씨와 알바노조 초대위원장이기도 한 구교현 당 대표가 비례 후보로 나섰다.

진보당을 주도한 자민통계 일부는 총선을 앞두고 민중연합당을 건설했다. 민중연합당의 창당과 총선 출마는 박근혜의 종북몰이 마녀사냥이 제대로 안 먹혔음을 보여 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역 활동 경험 많은 민중연합당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에 지역 후보가 많이 출마했다.

녹색당도 정당지지를 면에서 비교적 선전하는 듯하다. 김진숙 씨 같은 좌파적 노동운동가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녹색당은 기본소득과 탈핵화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기후정의운동에 앞장섰던 이유진 후보(서울 동작갑),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의 이계삼(비례) 후보 등이 주요 후보다.

이 정당들은 모두 민주노총의 총선 요구안을 지지했다. 민주노총 후보, 지지 후보를 포함해 네 정당 모두의 선전을 바란다.

이슈

물론 이 정당들이 노동계급의 진보·좌파적 가치를 대변하는 데서 아쉬움도 있다.

정의당 지도자들 일부는 태극기와 애국심 마케팅을 펴는 등 보수층을 지나치게 염두에 둔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런 태도는 자칫 우파에게 자신을 끌어줄 수 있다. 또한 인천에서 제주 강정마을 진압을 지휘한 윤종기와 단일화 경선을 하는 등 진보의 가치 기준에 어긋나는 후보 단일화를 추구한 것도 문제적이다.

민중연합당은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극복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운동이 줄곧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고용허가제 폐지 등이 빠져 있다. 역사적으로 스탈린주의 정당들은 이 쟁점들에서 약점을 보여 왔는데(가령 프랑스 공산당이 “위대한 프랑스” 운운하며 식민 정책과 이주자 차별을 정당화한 사례나 성소수자를 천대하던 전통), 그런 전통과 연관이 없기를 바란다.

좌파적 개혁정당인 노동당의 경우, 이주민 공약에서(나쁘진 않지만) 고용허가제 폐지 문제 등을 누락시켜, 이 쟁점에서 주류 사민주의를 추구하는 정의당(고용허가제 폐지를 공약함)보다 취약한 것은 놀랍고 아쉽다.

녹색당의 기본소득 공약은 노동자들, 특히 청년 노동계급이 좋아할 만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면 증세를 해야 한다는 공약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 온라인 기사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도 함께 읽어 보십시오.



김종오 기자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장호중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잘 보여 줬듯이,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지키지도 않고 지켰다고 우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굳이 의미 있는 공약을 찾아내려면 대학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 제정 등이 완료돼 기정사실화된 것을 공약에 포함시킨 것일 뿐이다. 그나마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진지하게 논의도 하지 않던 제도를 부랴부랴 만든 것이라 여기저기 구멍이 많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자 연대> 169호 온라인 기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를 보시오.)

오히려 새누리당은 선거 직후에라도 19대 국회를 다시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지렛대로 쓰일 악법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 법 통과를 그토록 강조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더민주당은 “의료영리화”를 막겠다면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총선 공약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다. 물론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를 제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심지어 법 취지와 상반되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여야 합의로 일단 통과시킨 뒤 꼼수를 쓰려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뿐 아니라 교육, 운수 등 공공서비스에 포괄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더민주당의 조건부 통과 입장은 뻔히 알면서 뒤통수 맞는 시

늑하기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더민주당 2018년까지 “모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나 인력 총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를 보건 특보로 임명한 것에서 보듯 더민주당의 의료 공공성 확대 공약은 일관성이 없다. 김종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인수위에 참가해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입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보건의료의 민낯

한편, 진보·좌파정당인 정의당은 “메르스 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을 뜯어고치겠다며 크게 세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의료 공공성 확대다. 이는 당연하고도 절박한 요구다. 민간병원 위주의 의료 체계 하에서는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가 판을 치는 한편,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건강보험 제도가 있다지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비보험(비급여) 진료를 근본에서 막을 길이 없다.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병원비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영리병원 허용 등 모든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지지할 만하다. 보건의료 인력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도록 한 정책도 꼭 필요한 일이다. 정의당은 산업 재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원청, 발주처가 재해 및 재난의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기업살인법”도 추진하려 한다.

다만,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단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제한된 것은 아쉽다. 진보적 보건의료 운동의 오래된 요구는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민간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를 공공병원 중심 체계로 바꿔야 한다.

확충해 민간병원 중심의 체계를 장차 공적 의료체제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정의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머무는 듯하다. 옛 민주노동당이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급진적 개혁 과제를 제시했던 것에 견줘 후퇴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공공병상 비율을 현재의 1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늘리겠다는 노동당의 공약이 더 진보적이다.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

강불평등 해소’다. 1인당 진료비를 연간 1백만 원으로 제한하고(나머지는 정부가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를 1백 퍼센트 보장하겠다고 한다. 이 점에서도 정의당의 공약이 더민주당의 공약보다 낫다. 하지만 수많은 진보 계열 대중에 지지해 온 ‘무상의료’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셋째 공약은 ‘공정한 보험료 체계’다. 핵심은 지역 가입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고소득자들의 보험료

를 인상하는 것이다. 기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온전히 자기가 내도록 돼 있다. 이는 경제가 호황이던 시절 기업주들이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려고 받아들인 조치였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보니(이는 정부의 의도적 책임 방기 탓이다)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집과 차가 있다는 이유로 고액의 보험료를 내기도 한다. 반면, 금융소득 등에는 보험료가 거의 부과되지 않고, 의사·변호사 등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이명박처럼 직장 가입자로 위장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보험료 체계는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것이 일관되게 노동자 서민에게 이익이 되려면 단지 부과 대상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상당 부분을 뜯어고쳐야 하는데 정의당이 그런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아쉽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정의당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다. 먼저 보험료 부과 대상을 ‘소득’으로만 일원화하려다 보면 심각한 부작용을 낼 수 있다. 재산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아파트 한 채와 기업주·부자들의 재산(수백 채의 고가 주택, 수만 평의 땅 등)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지만 이를 위해 후자에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다. 이 점에서 보면 더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겠다고 한 방식이 좀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지방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서울 한강

변의 대궐 같은 빌라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이다.

다음으로 정의당이 추진하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르면, 소득 상위 16.7퍼센트는 건강보험료가 6만 8천 원가량 오른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진짜 부자들도 있지만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도 포함될 듯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5년 4사분기를 기준으로 상위 10퍼센트에 속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천20만 원인데, 최상위로 갈수록 소득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 중 일부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또, 상위 10퍼센트 이하 20퍼센트 이상에 속하

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백만 원가량 되는데 여기에는 어지간한 맞벌이 가구도 상당수 포함될 것이다. 이들에게 “고소득자”, “무임승차”라는 딱지를 붙여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보험료 상한제(소득 상한제) 덕분에 연봉이 수십억 원씩 하는 대기업 CEO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고, 기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인데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소득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기업주·부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옳다.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시도와 노조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 세종호텔 앞에서는 지난 몇 년간 노동자들의 시위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 세종호텔 사측은 이 투쟁을 이끌어 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동조합(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싸워 온 세종노조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다. 2006년 세종노조를 민주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해 2014년 말까지 위원장을 맡아 세종노조를 이끌었다. 2011년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고, 2012년 1월에는 38일간 호텔 로비 점거 투쟁을 이끌었다.

사측은 김상진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지난해 1월, 입사 이후 23년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웨이터 업무를 하라고 발령을 했다. 사측의 노동조건 공격에 맞서 온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이자 노조 탄압을 위한 부당한 강제전보였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사측은 지난해 2월부터 임금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를 공식 해고하려 한다.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를 위한 상별 위원회가 3월 29일과 4월 8일에 열렸고, 4월 중순 즈음에 해고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탄압에 맞서 꾀꾀하게 싸우고 있는 김상진 전 위원장을 4월 6일 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사측이 최근 징계를 추진하는 이유를 “노동자들을 더욱 공격하기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텔은 3년 연속 적자인데 특히 메르스 사태로 지난해 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2014년도 당기 순손실이 15억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5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적자를 해결하려면 노동자들을 공격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이를 위해 저항하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노조에서 적지 않은 구실을 하고 있는 저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4월 6일 '세종호텔의 표적징계, 노조탄압, 악랄한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세종호텔에 면담을 요구하자 사측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가운데가 김상진 전 위원장.

“특히 올해 단협에서 사측은 연봉제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탄압은 이런 공격을 위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호텔업계가 성장하면서 파이가 커지긴 했지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2015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시 내 호텔 수는 4년 전보다 갑절가량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심화한 경쟁 속에 호텔업계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수익을 높이려 한다.

노동자 쥐어짜기

“새로 짓는 호텔들은 총지배인 임금이 월 3백만 원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정규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아웃소싱을 해서 엽니다. 그런 곳에 비하면 여기[세종호텔]는 그나마 노동조건이 훨씬 나은 편이죠.”

그래서 호텔들은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공격하고 있다. 세종호텔 사측도 종로 한복판

에 세종호텔과 비슷한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고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급격하게 악화시켰다.

“3년째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연봉제를 확대해 임금을 30퍼센트 정도까지 삭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 조합원들의 연봉이 10~30퍼센트 삭감되고, 세종연합노조[2011년 설립된 친사측 노조로 현재 세종호텔의 다수 노조이다. 이하 ‘연합노조’로 표기] 조합원들의 연봉도 대부분 깎였습니다. 정규직들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 알바나 임시직,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니까 새로 채용되는 비정규직의 처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 노동자들의 일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5년 전만 해도 3백 명에 가깝던 정규직이 이제 1백40명가량으로 줄었다. 특히 사측은 기존에 노동조합이 싸워서 막아 왔던 것들을 다시금 들이밀고 있다.

“원래 단협에 1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향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연합노조 지도부가 이 단협을 후퇴시키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2014년 8월까지의 고용안정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외주화를 못했는데 이게 만료되자 사측은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습니다.”

연합노조 지도부는 이밖에도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데에 합의해 주는 “회사의 파트너” 구실을 했다.

사측은 이에 저항해 온 세종노조에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더 힘들고, 불안정하고, 저평가되는 일로 강제전보”를 해서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2011년부터 강제전보는 끊이지 않았다.

“호텔 프런트에서 일해 온 입산부를 식당 서빙 업무로 강제전보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병가도 쓴 적이 있는 사무직 조합원을 객실 청소로 강제발령을 내고, 기술직에 있던 사람을 세탁물 수거 관리로 보내는 식이에요.

“2014년에도 로비 청소 파트로 조합원 3명을 보내고, 2015년에 저와 고진수 [현] 위원장 등을 강제전보했습니다. 저는 웨이터로 보냈고, 고진수 위

원장과 한인선 부위원장은 전문 요리사인데 다른 직원의 일을 보조하는 조리 지원 파트로 보냈습니다.”

세종노조는 이런 탄압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해 왔다.

“강제전보 철회를 위해 2013년 5월부터 호텔 앞에서 매일 선전전을 하고 매주 목요일 집회를 해 왔습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노동조건 후퇴와 공격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이 위축돼 있기도 하지만 “불만도 엄청 크다”며 “내부 조직화와 외부 연대를 함께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압에 굴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노조를 새롭게 건설한다는 생각으로 조직 활동을 하려 합니다.

“2012년 파업할 때도 연대하러 많이들 왔습니다. 그때 연대단위들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를 몸소 경험을 해봐서 조합원들은 연대의 소중함을 많이 느낍니다. 세종노조 조합원들이 지금은 10여 명밖에 안 되지만 밖에 조합원들이 몇 백 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힘내서 싸워갈 생각입니다.

“길게 보고 가야 할 싸움이라 지치거나 조금해 하지 말고, 꾸준하게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구호처럼 싸울 것입니다. 정세를 잘 활용하고, 주명건(세종호텔 회장)의 비리도 폭로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려 합니다.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대위(현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세종호텔 노조가 참가하고 있다)를 확대해서 그런 투쟁들을 실질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정리 정선영

함께 참가합시다!

노동탄압 분쇄·세종호텔 규탄 집중 결의대회

일시 : 4월 14일(목) 오후 6시
장소 : 세종호텔 앞(명동역 10번 출구)
주최 :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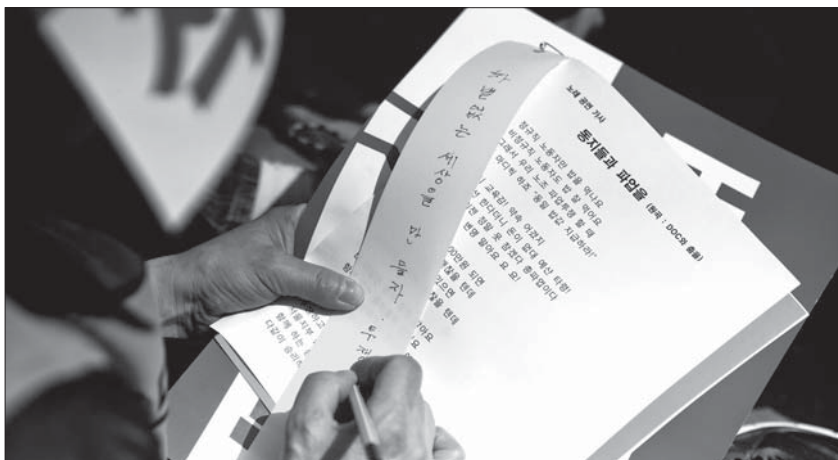
총선용 생색내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4월 7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주노총의 지적처럼 “총선용 생색내기”일 뿐이다.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총 2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새로 제정됐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향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간제법을 잘 지키라는 얘기다.

그 외에도 기간제 경력을 인정하고,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식대·출장비·통근버스 등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다. 지켜진다면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철폐 정부부터 지켜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4월 1일 파업 집회에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쓰고 있다.

도움이 되겠지만 가이드라인은 아무 강제력이 없어 사측에 이익이 될 때에만 실제로 효과를 낸다. 학교비정규직 노

동자들이 식대, 정기상여금 등을 요구하며 투쟁한 데서도 알 수 있듯 정부조차 지키는 내용은 기업들이 지키

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조금 개정했다. 원청 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장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노력”하라는 내용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기업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유도하겠다는데서 만든 ‘서포터즈’가 우수 사례로 포상한 기업들을 보면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잘 드러난다. 기아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서울성모병원, 한국GM 등이 모범 기업으로 꼽혔

다.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거 사용할 뿐 아니라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곳도 여럿 있다.

정부가 정말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기대한다면 이를 법제화하고, 여기는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면 된다. 비정규직을 확대할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보호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거짓말일 뿐이다.

최근 새누리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8~9천 원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가 이를 번복했던 것처럼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빈말을 내뱉는 것은 노동자들의 분노만 살 것이다.

조명지

조선업 위기와 현대중공업의 ‘긴축경영’ 선포

공격에 단호하게 맞설 준비를 해야

조선업 위기가 지속되면서 고용불안, 임금 삭감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의 주요 노조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정부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울산·거제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해 실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와 재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업 빅3 가운데 하나인 현대중공업 사측이 인사 정책에 관한 “근본적 체질개선”을 선언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더 혹독하게 고통을 전가하겠다는 예고다. 현대중공업 회장 최길선과 사장 권오갑은 3월 22일 창립 44주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며 “평가제도 등 각종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호황기에 만들어진 지나친 제도와 단협 사항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대우조선노조의 쟁의 자체-임금 동결 동의서 제출, 삼성중공업노조의 수주 활동 전개 등을 사례로 들며, 이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더한 고통을 감내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사측은 이미 지난 2월 조직 개편을 실시해 팀 평가제도와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사용자들이 성과 경쟁을 강화해 노동자들에게 더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사측에 줄 세우기를 유도하려고 흔히 써먹는 수법이다.

성과 경쟁 강화는 또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지난해 초 사무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노조의 반발 속에서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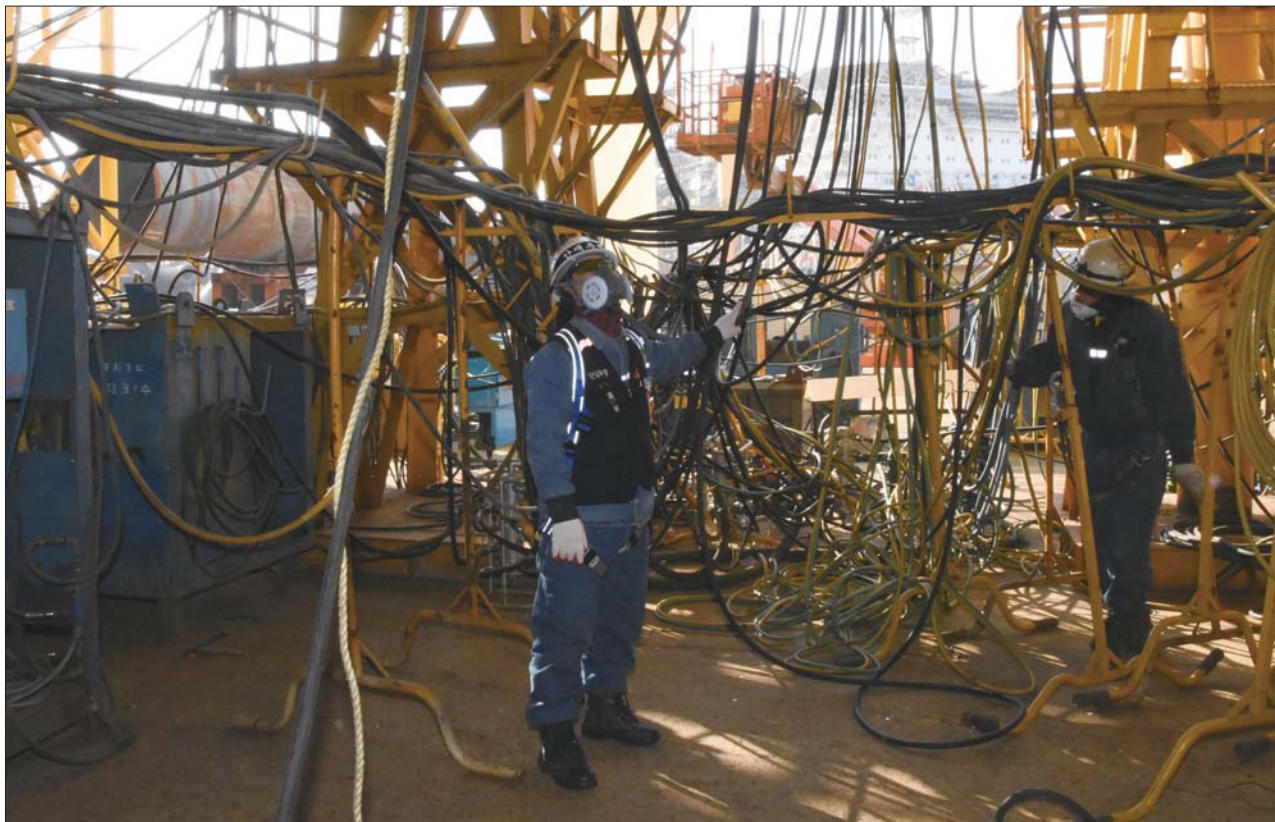


사진 출처: 현대중공업노동조합

노동자는 위기에 책임이 없다 “회사의 생존”보다 노동자 생존이 우선이다.

사무직 노동자들, 생산직으로까지 확대하지는 못했다.

사측은 올해 이 같은 공격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1년간 사무직 관리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중을 45퍼센트나 늘려 6백20여억 원의 인건비를 줄였다고 보도했다. 사측 관계자는 인건비 절감이 곧 “체질 강화”라고 말했다.

전환배치

이번 담화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단협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근 사측은 일감이 줄어든 사업부를 중심으로 생산직 정규직 조합원 1백여 명을 전환배치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환배치 시 노조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단협조차 지키지 않았다.

사측은 앞으로 2백여 명 정도를 더 전환배치할 계획인 데다, ‘순환근무’를 제도화해 더욱 유연하게 노동자들을 배치하려 한다. 이를 위해 노조의 저항에 근거가 되는 ‘단협’을 아예 뜯어고치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임금·단협교섭 지도지침’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여기서 노동조합의 “과도한 인사경영권 개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전환배치, 해고 등에 관해 노조와 협의(혹은 합의)해야 한다는 단협 조항을 문제 삼았다.

사측은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환배치가 고용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외주화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해악적이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전환배치로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더 높아졌고, 기존에 정규직이 일하던 업무를 외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측은 지난 2년간 희망퇴직과 외주화 확대로 유연성을 높이려고 애써왔다. 안 그래도 조선업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정규직 대비 2~3배나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경제 위기를 빌미로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동안 임금이 체불되기 일쑤였고, 올 초부터는 아예 임금이 10퍼센트 깎이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같이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이 늘면 늘수록 중국에 정규직의 노동조건도 공격을 받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한편, 사측은 현대중공업노조가 이번 총선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화 후보인 무소속 김종훈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보수 언론들도 “경영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활동이나 한다”고 비난에 가세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서 고용과 노동조건 보호를 내세운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정몽준의 정치적 고향인 울산 동구에서 진보좌파 후보가 당선한다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동운동 전반에도 무척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요컨대, 현대중공업 사측의 이번 담화는 수익성 위기에 직면해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올해 공격은 더 강화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만큼 노동자들도 단호하게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임단협 요구안 확정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 인상, 고용 보장, 현재 도입된 성과연봉제 폐지, 전환배치 통제, 신규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로 내걸었다. 사측의 공격을 막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들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조선업종노조연대는 7월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투쟁이 성공적으로 조직되려면, 지금부터 전환배치, 사내하청 임금 삭감 등 공격에 맞서면서 투쟁의 기운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김지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박혜성 기간제 교사

3월 2일 새 학교에 출근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어느덧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다. 6개월 계약(3월 1일~8월 31일)이 끝나가는데도 교감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2학기 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온다. 1년 단위 계약이 어느 순간 6개월 계약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내내 발을 동동거리고 가슴을 졸이며 지낸다. 오늘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모습이다.

기간제 교사 제도는 1997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사실 53년 동안 이름만 달리해 지속돼 왔다. 1963년에 ‘임시 교사의 임용’이라는 법적 조항이 생긴 이래 ‘임시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기간제 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

증을 가진 자로 임용된다. 그동안 명칭이 달라지면서 기간제 교사의 임용 사유가 추가되며 규모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교육부 통계를 보면, 기간제 교사는 전국적으로 4만 6천8백71명에 이른다. 전체 교원의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간제 교사가 늘어난 것은 교사가 부족한데도 정부가 정규직 교원 채용은 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늘려 왔기 때문이다.

1998년 IMF 고통 떠넘기기로 교원 정년은 65세에서 62세로 낮추고 명예 퇴직 연령도 40세 이상으로 낮춰 퇴직 교사 수가 급증했는데 부족한 교사의 상당수를 기간제 교사로 채웠다.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이래로 선택 과목이 늘고 수준별 수업, 집중이수제 등이 생겨 필요한 교사 수가 늘었지만 이 때도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늘렸다.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유연한 인력 운영을 추구한 것이 기간제 교사가 계속 늘어난 요인이었다.

고용불안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 불안은 매우 심각하다. 미발령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경우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계약서에는 ‘정규교사 총원 시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음’이라고 명기돼 있다. 또, 정규직 교사의 휴직이나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기간제 교사는 통상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정규직 교사의 조기 복직이나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은 6개월,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김초원·이지혜 쌤 우리 선생님 맞다고요!” 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교원의 순직 인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가 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학교 관리자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한 교사로 살아야 한다. 한 기간제 교사는 한창 사회 쟁점이 된 주제로 제기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 해에 재계약을 할 수 없었

다. 파견 나간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지도 않았고, 그 학교에서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연장 근무를 했던 교사였는데도 말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겪는 어려움도 털어놓기가 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박근혜 정부는 3월 21일 시·도 교육청에 재차 공문을 보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전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 압력에 굴복한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교조 전임자의 ‘대량 해고’가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1천5백27명을 파면·해임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2001년에 준 노조 사무실 지원금 6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전교조 은행 계좌를 전부 압류하는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임대료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이며, 결과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압류를 통한 회수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돈 줄을 틀어쥐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막무가내 식 탄압의 목적은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급·교원평가 강화, 교육재정 긴축,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등 신자유주의 교육 공격을 밀어붙이는 데서 전교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교조는 흔들림 없이 저항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14일 ‘본부 복귀 거부 전임자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의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4월 4일에는 교육부의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금지와 징계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2주기 공동수업 및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



정부의 탄압에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 3월 14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복귀 거부 전임자 삭발 투쟁.

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3월 24일에는 1백77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의 정당한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참교육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들의 거둬들인 후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교조의 투쟁을 방어해야 마땅한 진보교육감들은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직권면직에 대한 법률 검토와 보류 입장’을 밝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어 진보교육감들은 일제히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우과 언론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추임새를 넣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진보교육감들의 동요와 후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기, 인천, 충북, 부산 등 하나둘씩 단협협

약을 해지하는 교육청이 늘어나고 있다. 광주, 세종, 강원, 전북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들은 전교조 사무실 퇴거 요청 공문도 보냈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의 《416 교과서》 사용 금지 조치 요구도 수용하는 모양새다. 광주와 서울교육청은 학교에 계기수업 관련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416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교육에 대한 엄정 조치” 문구를 포함하거나 교육부의 공문을 그대로 첨부했다. 교육부가 관련 조치에 동조하지 않는 교육청에 재차 공문을 보내고 부교육감들을 소집해 압박하자, 충남, 인천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학교로 내려 보냈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배경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진보적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그런데 어찌 진보교육감이 정부의 ‘세월호 운동 탄압’에 동조해 전교

조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할 수 있단 말인가?

진보교육감들은 후보 시절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정부에 복종하는 교육감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바로 이것이 노동자·민중이 진보교육감을 지지한 이유일 것이다.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효과적 대응

한편,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탄압에 맞서면서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대의원대회는 전면적인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변성호 집행부는 교원노조법 2조(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확보, 정의 행위와 정치 활동 금지 조항 폐지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재합법화는 물론 그간 노동조합의 발목을 잡아왔던 독소 조항을 없애 노동조합의

권리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총선 시기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적극 제기해 사회 쟁점화 시키고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입법발의 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야당에 의탁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민주당은 지금까지 교원노조법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더민주당의 전신이 반쪽 짜리 교원노조법을 제정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압박해 독소 조항을 거의 없애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진행된 1999년 전교조 합법화도 1989년부터 전교조 조합원들이 징계와 해고를 무릅쓰고 투쟁하고 1997년 1월 민주노총의 파업이 벌어지면서 쟁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서는 탄압에 맞서기 보다 이를 우회하려는 실용주의적 대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교육노동운동재편모임’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전교조를 시도별·급별·설립자별 노조로 재편해 설립신고를 한 후 산별노조를 건설해 해고자를 가입시키면 법외노조의 멍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참교육 실천과 투쟁을 대립시켜 법외노조 시기 전교조가 해야 할 일은 대정부 투쟁이 아니라 학교혁신, 풀뿌리 교육운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탄압을 모면하는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투항’하는 것이다. 전교조 탄압의 본질과 경제 위기 상황을 볼 때, 합법주의와 투쟁 회피 전략으로는 노동조합도, 참교육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심스럽다. 괜히 능력 없는 기간제 교사로 낙인 찍혀 다음 계약에서 밀려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처우

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 동안 정규직 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하고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등을 똑같이 요구 받는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육공무원’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 신분은커녕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아이들을 구하다가 희생 당한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는 여태껏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 역시 차별이 심각하다. 기간제 교사는 2013년부터 성과급을 지급받기 시작했는데, 성과급의 기준

이 되는 표준 호봉을 정규직 교원과 달리 적용한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호봉 승급을 제한했고 그것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 표준 호봉까지도 차별하는 것이다.

호봉 승급 차별도 큰 불만 중 하나다. 1년을 채우면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계약할 때 정한 호봉으로 고정돼 제대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기간제 교사들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지급받지 못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주기로 했으나 정규직과의 지급률에 차별을 둔다.

또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경력 3년 이상 된 교사에게 부여하는 180시간에 이르는 교사 재교육 과정인 ‘1정 연수’도 받지 못한다. 기간제 교사 중에도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사가 꽤

많은데도 말이다. 최근 기간제 교사의 증가와 이들이 차지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교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1정 연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 밖에도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차별은 꽤 많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근수당 차별과 출산 휴가, 병가 등의 휴가도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등 온갖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지금까지 고용 불안과 차별에 속한 끓어던 기간제 교사들이 최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를 결성했다.

핵심 요구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라는 것이다. 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채용과 쪼개기 계약과 중도 계약

해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근수당, 1정 연수, 복지포인트 지급 등 정규직 교사와의 차별을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도 요구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철폐도 요구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당연히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요구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정규직 교사를 뽑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며 교육을 실천해 온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로 전환될 기본 자격이 충분히 있다.

‘전기련’은 회원 가입을 늘리고 조직을 강화하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전환은 향후 전기련의 확대 속에 민주적 토론을 거쳐 정하는 것으로 열어둔 상태이다.

현재 전기련은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또, 전기련 소개글과 가입원서가 포함된 리플릿도 제작했다.

반갑게도 전교조는 이 서명지와 리플릿이 기간제 교사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전기련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연대를 밝히고 있다.

정규직 교사든 기간제 교사든 똑같은 ‘교사’로서, 이 땅의 참교육과 교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정부의 치사하고 악랄한 공격과 차별에 맞서 우리의 핵심 무기는 오직 더 크게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2년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을 이어가자

김지윤

2년 전, 3백4명의 생명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고, 고단해도 자식들과 단란한 삶을 꾸려가던 평범한 사람들은 교복 입은 학생들만 봐도 마음이 아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조금치도 사라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지우기에 여념이 없다. 2년 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새누리당은 선거가 다가오자 “새누리당을 살려달라”며 읍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한 인사들과 세월호 화물 불량 고박업체의 대표를 공천해 유가족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저들의 뻔뻔함과 달리 진실 규명을 외치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호소에 화답하려는 노력은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2주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간담회 요청으로 유가족들과 4·16연대 상임운영위원들은 전국을 누비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세월호 세대”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희생 학생들과 동갑(1997년 생)인 신입생들의 마음가짐도 남다르다. 전국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대학모임들이 결성됐고 한신대, 인하대, 이화여대, 부산대 등 여러 대학에서 영화제와 간담회가 뜨거운 호응 속에 열리고 있다. 지난 3월 말 ‘세월호를 기억하는 고대인 모임’이 주최한 유가족 간담회에는 1백10여 명이 참가해 여전히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여 줬다. 뿐만 아니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진실과 추모의 길을 함께 걷자”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진실 규명 운동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표명했다.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거리 서명운동과 추모 문화제도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열리고 있다. 최근 전교조는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를 발행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징계 협박에 굴하지 않고 《416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다시금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광범한 행동이 재개된 것이다.

박근혜의 진실 침몰 시도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운동 참가자들의 자신감을 키우려면 4월 16일 2주기 범국민 추모문화제에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참가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전국 집중 범국민추모문화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진실 은폐의 주범인 박근혜 정부를 겨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후 정부의 특조위 활동 종료 시도에 항의하며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위한 투쟁이 분명한 정치적 방향을 갖고 전진할 수 있다.



4·16 이후에도 진실 규명을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두 번의 청문회를 통해 일부 진상규명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특조위는 3월 28~29일 2차 청문회를 통해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센터의 교신기록이 편집·조작됐고 해양수산부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자료 상당 부분이 왜곡됐다는 의혹 등을 들춰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운항 승인을 받으려고 해경에 현금 등 향응을 제공한 일이 폭로됐다. 해수부 세월호 인양단장은 인양업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청해진해운이 선내 대기를 지시했다는 새로운 증언도 확보됐다.

절단

문제는 조사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 개시 요건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1월 1일이 특조위 활동 시작일이라 우기며 6월 30일로 종료시키려 한다. 이미 이 계획에 따라 예산과 인력 배치를 끝낸 상황이다. 또한, 7월 이후에야 세월호가 완전히 인양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특조위가 세월호를 직접 조사할 수 없게 된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침몰 원인 조사와 미수습자 9명 수습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하는데도 해수부는 특조위에 일방적으로 세월호 절단을 통보해 비난이 일었다.

2월 15일 특조위는 1차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경 수뇌부에 대한 엄밀한 수사를 위한 특검 실시를 19대 국회에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는 유가족들에게 기소권과 수사권 대신 특검을 받으라고 강요해 놓고는, 막상 특검요청안이 제출되자 왜 특검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더민주당은 법사위에 특검요청안을 첫 안건으로 올렸다가 새누리당이 반발하자 결국 선거법 개정안 논의 뒤로 미뤘고 이 와중에 산화되고 말았다. 더민주당은 2014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번 유가족의 요구를 묵살하고 뒤통수를 쳤는데 여전히 진실 규명에 진지하게 나서지도, 유가족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 정부와 주류 정당들이 진상 규명을 외면하는 상황을 그냥 둘 수 없다며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박주민 변호사가 더민주당에 입당해 총선 후보로 나섰지만 총선 이후 더민주당이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견주면 부차적일지라도 노골적 친자본주의 정당이라 새누리당이 경제 위기를 앞세워 기업주 살리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왔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두고도 더민주당은 비슷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4·16연대는 더민주당에 독립적 태도로 유가족과 함께 4~5월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노동계약 저지와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 시기에 집중해 벌어진다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증폭시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도 한 발 더 전진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캠퍼스에서 커져가는 추모와 진상규명 목소리

이화여대에서는 2월부터 학내 단체들이 ‘세월호 2주기를 준비하는 이화여대 네트워크’(이하 이화여대 네트워크)를 꾸렸다. 현재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 이화여대 청춘의지성, 청년하다 이대지부가 함께하고 있다.

이화여대 네트워크는 매주 목요일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을 통해 매주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인 4월 7일 하고 시간 서명운동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로 뜨거웠다. 이화여대 네트워크 학생들은 마이크를 들고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와 1·2차 세월호 청문회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폭로했다. 박근혜가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과

제임을 힘주어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명을 하러 와 1시간도 안 돼 2백13명이 서명을 했다. 서명대기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였다. 서명한 학생이 친구를 데려오고, 한 학생은 수고한다며 음료수를 주고 갔고,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노점상인이 수고한다며 간식을 주고 가기도 했다. 결국 준비했던 리플릿과 리본이 동이 나서 계획보다 일찍 마무리했다.

4월로 접어들면서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이 다시 세월호를 기억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2월부터 대학 내에서 꾸준히 세월호 2주기 집회와 특별법 개정 요구를 알리던 노력이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세월호를 잊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어떻게든 보태고 싶은 마음이 물씬 느껴지는 캠페인이었다.

양효영 노동자연대 이화여대 모임 활동가

사진: 이대민

양효영 기자